

“아파도 일하고 죽어도 일해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폐기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진짜 주범 노동강도강화 박살내자!

최근 자본의 근골격계 대응 흐름:

산재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치료는 한정적으로! 산재치료 자체를 최대한 봉쇄하라!

○ 경총은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

○ 최근에 들어서는 9월 22일 대우조선 적정요양기간 연구보고 공청회 실시, 10월 4일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실태조사 발표(경총 부설 노동연구원)를 통한 산재보험 민영화 도입제기, 12월 말 산재보험제도 정책 보고서 완료예정, 산재환자 도덕적 해이 사례집 제작, 국감시 국회위원들의 동조발언 등 위 내용을 근거할 구체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경총은 지난해 기업안전위원회를 구성, 노동계내의 전국적인 근골격계 질환 다발과 이에 대한 대응투쟁에 맞서 작업관련성 직업병의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노동자의 저항을 거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통제의 주도권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현실적 목표달성을 목표로하고 있음.

○ 한편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신재보험 민영화’ 및 ‘요양 관련제도 개악’ 을 추진하며 이를 전제로 05년 1월에는 입법 추진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의무에 관한 규제 순응도 조사’ ■ 10월 7일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 “산재보험 도덕적해이 근절방안, 산재보험과 민영보험과의 협력방안” 에 대한 내용 연구 중간발표 등을 시행하며 경총의 행보를 발맞추고 있고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요양치료마저 제한하고 있는 근골격계 인정기준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을 마련, 이사장 명의로 전국 지사로 하달될 예정이며 이는 당장 산재신청과 요양 그리고 복귀과정에 있는 수 많은 노동자에게 경총의 행보하에 실질적인 감시■통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임.

‘찢 때까지 찢고 버린다’ 이것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다.

그 중 노동부 주관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려 하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에 따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실태조사 발표(경총 부설 노동연구원) 내용에 근거하여 산재인정 기준에 기업에게 불리하며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퇴행성 질환, 과거질환 배제/ 엄격한 현장조사의 실시/ 일상생활 관련조사/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한 **인정기준 축소(확실한 진단명 강제)**

○ 상체질환 통원원칙/ 요통에 대한 별도 관리/ 총 요양기간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참고(통상 1-2주)/ 요양기간 결정에 자문의 권한 증대 /재요양시 자문의 판단 반드시 경과시키기 등으로 **입원치료 축소(디스크를 제외한 통원치료-근무중치료-를 원칙으로 명시)**

○ 제출된 요양신청서와는 별도로 내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5단계로 실시/ 추가로 4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로 다시한번 업무관련성을 엄격히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최대한 개인질병화를 시도. 즉 **업무관련성 평가 엄격화(노출기간, 강도 등을 계량화)를 통한 산재승인 축소.**

○ 요양상병, 치료방법, 치료범위, 치료기간을 결정하는 질병별 처리지침을 구성하여 **장기요양에 대한 강제종결 시도.**

○ 이는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병이 증가하였으나 그 해결방법 역시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재인정기준 개악을 감행함으로써 발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이윤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조정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고정 불변으로 두고 노동자가 병들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최소한의 치료조차 외면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이 노동력을 쥐어짜고 병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겠다는 수작임.

동지들, 이렇게 대응합시다!

○ 경총과 노동부의 이와같은 대응은 자본가의 총 사령부답게 건강하게 일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으려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며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애초에 무력화 시켜버리겠다는 것임. 또한 10월 20일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면담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침들을 가감없이 처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강력하고 전국적인 대응투쟁이 시급히 요청된다.

○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발생 건수는 외국과 비교하면 1/10 수준이다. 아직도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산재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높은 노동강도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축소하는 인정기준(안)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기준을 폐기하고 보다 폭넓은 인정기준이 마련과 산재 승인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자문의 제도 폐지, 신속한 승인인정이 오히려 시급히 필요하다.

○ 따라서 경총과 노동부 타격을 주요방향으로 설정. 대중적 쟁점화를 위한 일상적 교육과 선전 / 정점으로 노대전날 타격집회 / 전국쟁점화를 위한 실천토론회 / 연말 연초 전국차원의 대중 직접행동(요양자 등)을 조직한다.

○ 통일중공업의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방안’에 따른 산재환자들 탄압사례, 각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벌이는 요양 승인과정에서의 장기화, 상병전환, 인정축소 등의 점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사안을 놓치지 말고 지역별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투쟁을 벌인다.

○ 근골격계 직업병의 핵심 원인인 노동강도의 완화없이 오로지 조속한 작업장 복귀와 통제로 이윤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노강에 대한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이번 유해요인조사의 근본 목적이며, 이것에 대한 대안 없이 질병의 근절 또한 없음을 확실히 하여 실제 재요양 및 장기치료의 원인을 해결한다.

○ 재정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다. 산재보험 재정고갈 등을 핑계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덕적 해이’를 들먹거리면서 산재인정 축소 및 장기요양중단 등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은 피병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산재요양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경총은 산재인정 및 요양 그리고 복귀의 과정이 투쟁의 동력화로 전환되는것을 원천봉쇄하고자 한다.